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관건

퇴직연금

- 동향 : 2012 고령자통계 요약
- 이슈 : 적정 노후소득수준 마련을 위한 국민, 퇴직, 개인연금 역할 분담 필요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7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9월 취업자 68.5만명 증가로 10년래 최고 기록

-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 10년래 최고인 68.5만명이 증가
 - 고용 증가세 지속: 2012년 10월 취업자는 2,500.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5만명 증가.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증가분이 40만명에 달함
 - 여성 고용율 증가: 경제난과 여성의 근로의지 상승 등으로 30~40대 여성 신규 취업자가 지난달 9만명 늘어남. 이에 따라 40대 여성의 고용율은 64.9%로 평균대비 15%p 높았음
- 하지만 20대 취업자는 5만명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높아져 청년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

○ 금융 동향: 2013년 글로벌 경기 하강 지속에 대한 우려로 하락

- IMF가 2013년에도 세계 경제는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로 하락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기준금리의 0.25%p 인하 등으로 9월 28일 2.79%에서 10월 12일 현재 2.77%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9월 28일 1,112.0원에서 10월 12일 현재 1,110.5원으로 1.5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2013년 글로벌 경기의 하강 지속에 대한 우려로 9월 28일 1,996.2에서 10월 12일 1,933.2로 63.0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9월28일	10월12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0.3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1.2	2.0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3.0	2.9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23.6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79	2.77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112.0	1,110.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996.2	1,933.2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9월 28일은 8월, 10월12일은 9월 수치임.

□ **경제 이슈: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관건**

○ **한국경제 성장률 급락**

-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5% 내외로 급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 행복감 변화**

-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행복감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8.5%가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15.4%만이 '좋아졌다'고 응답
 -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38.6%), 자영업자(44.0%),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50.0%), 중졸 이하 학력자(40.9%)의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행복한가에 대한 의견**

- 우리 국민들의 50.9%는 '보통이다'고 응답
 - 현재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50.9%는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40.5%는 '그렇다', 8.6%는 '아니다'고 답변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직업별로는 안정적인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학생, 직장인들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자산과 소득은 많을수록 행복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서울이 33.1%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조사됨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20대, 여성, 경기지역, 공무원, 자산-소득 많은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중졸 이하, 50대 이상, 남성, 자영업 종사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산 1억원 미만'의 응답자였음

○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

-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 개인적 요인 > 사회적 요인 > 정치적 요인 순으로 조사됨
 - 행복감이 각 요인에 얼마나 영향을 받지는 질문한 결과, '많이 받는다'에 응답이 경제적 요인 62.3%, 개인적 요인 58.4%, 사회적 요인 42.3%, 정치적 요인 29.2%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줌

- 경제적 요인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62.3%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특히, 40대, 자영업,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경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
 -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 49.1%, '물가' 35.4%로 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가계부채' 7.9%, '주택가격' 7.6%로 응답률이 낮음

- 개인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행복감에 가장 영향이 크며, '노후준비', '건강', '가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우리 국민들의 58.3%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거의 없다'는 응답자는 1.1%로 낮게 나타남
 - 20대 미혼,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들의 행복감이 개인적 요인과 높은 관련

- 사회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양극화',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사회적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응답자는 42.3%인데,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40대의 행복감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양극화 36.6%, 강력범죄 33.3%의 영향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 19.5%, 학교폭력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정치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정치인 비리 등은 국민들의 행복감을 낮추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의 51.8%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20.1%는 '정치권 비리'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여 '흠집내기식 선거' 16.8%, '정당간 다툼' 11.2%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차기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할 요인과 정책과제

- 차기정부는 국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경제적 요인'에 가장 집중해야
 - 차기정부가 국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관심 가져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적 요인' 56.3%, '사회적 요인' 31.2%, '정치적 요인' 9.2%, '개인적 요인' 3.4%의 순으로 응답되어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 자영업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서울 거주자들은 '소득', '물가'와 연관된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여성, 고액 자산가, 고학력자들은 '강력범죄'와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차기정부가 국민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 할 정책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
 - 우리 국민들은 행복감 제고를 위해 차기정부에서 꼭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물가 안정' 38.4%, '일자리 증대' 24.8%로 꼽았으며 '복지 확충' 12.8%, '민생치안 강화' 11.4%, '경제민주화' 10.3% 순으로 응답함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2012 고령자통계 요약 (통계청 보도자료 요약)

○ 도시와 농어촌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 비교

-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생활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지역 고령자가 높아
- (부모 부양) 도시지역 고령자는 '가족과 정부·사회', 농어촌지역 고령자는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
- (건강평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고령자와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고령자는 도시지역이 높아
- (장례방법) 도시지역 고령자는 '화장후 봉안(35.4%)', 농어촌지역 고령자는 '매장(54.6%)'을 더 선호
-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도시지역(42.7%)이 높아
- (자녀와 동거) 현재 자녀와 살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농어촌지역(79.1%)이 높아

○ 인구

- (고령인구)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1.8%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고령자의 성비는 70.1이고, 2030년에는 81.1로 높아짐
-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16.1로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고령가구) 고령가구의 비중은 18.9%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시도별 고령화) 고령자와 고령가구 비중은 전남지역이 가장 높아
- (재혼건수) 고령자의 재혼건수는 여자(799건)보다 남자(2,234건)가 더 높아

○ 보건

- (사망원인) 고령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
- (암 종류별 사망률) 고령자의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아
- (기대여명)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17.2년)보다 여자(21.6년)가 4.4년 더 많아
- (고령자 의료비) 고령자의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32.2% 수준
- (건강평가) 고령자의 절반(49.4%)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

○ 노동

-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 수준
-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고령층(55 ~ 79세) 인구의 59.0%가 취업을 희망
- (일자리 선택기준)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이 가장 높아
-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은 전체 평균(100.0)보다 낮은 75.6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중은 27.4%
-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1.8% 수준
- (생활비 마련방법) 고령자의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
-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고령자는 '경제적인 어려움(40.2%)'으로 가장 힘들어 함
- (복지서비스) 고령자가 가장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33.3%)'이 가장 많아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공공시설 중 '사회복지시설(41.1%)'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고령자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13.8%, 이중 '영화관람'이 최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고령자의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34.7%)'
- (단체참여) 고령자는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에 가장 많이 참여

□ 이슈 : 적정 노후소득수준 마련을 위한 국민, 퇴직, 개인연금 역할 분담 필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향후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수준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은 안정적 노후소득준비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전 소득의 70%~80%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경우도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경우 약 60% 수준이 적정(필요, 목표라는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 노후소득수준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는 0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5층의 자산까지 매우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공사적 연금자산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점에서 공사적 연금소득 수준을 통해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달성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가정에 의하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해서만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시 56.2%, 35년 가입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I. 노후소득준비 관심 증대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 인식 증대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
- *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 712만명, 전체 인구의 14.6% 차지)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되고 있음
- '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향후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08년 50%에서 매년 0.5%p씩 감소하여 '28년까지 40%수준으로 감소
- ** OECD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소득 대비 70%~80%로 논의된 바 있으나, 분석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 ***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으로 하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이상적인 system으로 논의되고 있음.

○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 소득대체율 방법으로 추정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연구방법 및 가정에 따라 다양함*
 -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자(월 200만원 가정) 소득의 60%수준에서 적정 소득대체율이 추정되는 경향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짐(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짐)
 - * 원종욱(2000) :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을 53%~71%로 추정
 - * 안종범·전승훈(2005) : 평균소득자 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은퇴전 소득의 66.5%
 - * 류건식(2009) :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각각 35%, 12.5%, 7.5%
 - * 석재은(2003) : 노인의 필요소득 수준은 평균 61%
 - * 강성호·이지은(2010) : 5분위 소득계층별 필요 소득대체율을 1분위(하위 20%) 100.7%, 2분위 73.6%, 3분위 64.4%, 4분위 58.8%, 5분위 49.0%로 추정
 - * OECD(2011) : 공사적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의 0.5 배인 경우 96.9%, 평균소득자 77.0%, 평균소득자의 1.5 배인 경우 68.7%로 추정(OECD 모형 기준)
 - * 한편,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공사적 연금 적정 비율수준을 공적:사적=60:40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음(Pension reforms must deliver affordable and adequate benefits, warns OECD)
- (분석결과 차이 발생 이유) 분석가정, 활용자료, 분석대상(가구 對 개인), 분석시점(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차이 발생), 적정(필요)소득 개념 및 정의 등 때문

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 필요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0층인 기초노령,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 노인 및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 * 1층 공적(국민)연금 : 일반인 및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강제적용 소득보장
 - * 2~3층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 : 법정 및 임의적용 소득보장
 - * 4층 기타소득 :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은퇴 후 발생가능한 소득원
 - * 5층 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등

- 그러나, 이들 소득원이 내실 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존재
 - * 기초노령연금의 보장범위(전체 노인의 70%수준)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월 9만 4천원 수준) 보장성이 약하다는 점
 -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는 제도 도입이 일천하여, 적용사각지대가 넓고, 급여수준도 낮다는 지적 (여기에 재정안정 문제 등으로 인해 급여수준은 향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점)
 - * 사적연금의 경우는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노후소득원으로 기능이 매우 희박하다는 문제 존재
 - * 기타소득, 자산 등은 일부 부유계층에만 존재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소득원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 군인
자산 및 역모기지활용	5층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연금보장(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기업연금		공무원
1차 안전망(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사학교원 군인 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료: 강성호·이지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2010)

○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 광범위

- 근로세대 인구(18~59 세 인구, 32,793 천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의 54.2%

- 근로세대 인구 전체에서 비경활,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체납자를 제외한 특정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적용자 규모는 45.8% 수준
- * 적용사각지대 규모와 연금사각지대와는 구분되어야 함. 왜냐하면, 적용사각지대는 특정시점에서 납부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하나, 생애기간동안 가능 근로기간이 40 년이라고 할 경우, 보험료 납부이력이 10 년(전체 근로기간의 25%)이상이면 이들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연금사각지대는 아님(적용사각지대 ≠ 연금사각지대)

<공적연금 적용현황(2011.12)>

18~59세 총인구 32,793천명 (100.0%)						
비경제활동 인구 10,611천명	경제활동인구 22,182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959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223천명				특수지역 연금 1,404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823천명				
		납부예외자 4,900천명	소득신고자 14,923천명		보험료 납부자 13,620천명	
			장기체납자 1,303천명			
32.4%	2.9%	14.9%	4.0%	41.5%	4.3%	
일시적 적용 사각지대 17,768천명 (54.2%)				적용자 15,025천명 (45.8%)		

※ 주: 15~64세 인구 37,223천명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생산

○ 기초노령연금과의 재구조화 및 공적 소득보장 내실화 필요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공적소득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77.4%('08년) → 82.5%('09년) → 82.6%('10년) → 83.1%('11년)로 증가하여, 보장률 자체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낮은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및 수급자 규모 등으로 인해 두 제도간 재구조화 및 공적소득보장의 내실화 요구

○ 국민연금 성숙단계에서 연금수급자 규모 및 급여수준 증가 예상

- 65 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65 세 이상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을 전망한 결과*,
 * 8.2%('11년) → 35.7%('20년) → 47.1%('30년) → 59.8%('40년) → 70.8%('5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50 년에 노인인구의 70.8%는 약 1 가구에 1.4 개의 연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금사각지대 문제는 수급여부 보다 급여수준의 문제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급여액(노령연금 기준)을 추정한 결과, '15 년 월 376 천원으로 추정되며, '50 년에는 월 2,530 천원*('12 년 현가, 약 799 천원)으로 추정

Ⅲ. 적정 노후소득 및 노후준비 수준 추정

○ 분석가정

- 월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소득자가 59 세까지 근로이력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적 연금에 가입
- 40 년(35 년, 30 년, 20 년) 가입자의 경우는 '12 년에 20 세(25 세, 30 세, 40 세)인 가입자가 59 세까지 가입하고, 60 세 퇴직하여 65 세 이후 20 년 동안 수급(85 세 사망)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 개인연금 9%(국민연금에 준함)
-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은 크게 소득 대비 소비수준으로 추정하거나 혹은 기존연구 및 OECD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60%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설정
- 공사적 연금급여수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법 체계하 ('12 년 48%~'28 년 이후 40%적용), 퇴직, 개인연금의 경우는 수익비가 1 이 되는 급여수준으로 설정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3%로 하되, 민감도 분석 시 3% ~6%변화고려
- 운영경비는 고려하지 않음

○ 분석방법

- 1 단계: 적정(필요) 노후소득 수준 추정
- 2 단계: 준비 가능한 노후소득 수준 추정
- 3 단계: 적정(필요) 소득수준과 달성가능 수준 간의 갭 분석

<연금유형별 급여 산출방법>

국민연금 급여산출(월기준)	$BP_t^{pp} = \alpha(A + B) \times (1 + 0.05 \cdot (n - 20))$ <p>(단, BP_t^{pp} : t시점에서의 국민연금 기본연금년액, A : 3년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월평균생애소득, n ; 가입년수, t=65세시점 2057년)</p>
퇴직연금 급여산출(월기준)	$BP_{12}^{rp} = \sum_{u=12}^{61} C^{ru} \cdot (1+w)^{u-12} \cdot (1+r^d)^{67-u} \cdot \left(\frac{1}{1+r^d}\right)^{46}/m$ <p>(단, BP_{12}^{rp} : '12년 기준 퇴직연금년액, $C^{ru} = W^r r^{ru}$, r^{ru} = 퇴직연금 보험료율, w = 임금상승률, r^i = 투자수익률, r^d = 할인률, m : 수급년수)</p>
개인연금 급여산출(월기준)	$BP_{12}^{ip} = \sum_{u=12}^{61} C^{iu} \cdot (1+w)^{u-12} \cdot (1+r^i)^{67-u} \cdot \left(\frac{1}{1+r^d}\right)^{46}/m$ <p>(단, BP_{12}^{ip} : '12년 기준 개인연금년액, $C^{iu} = W^i r^{iu}$, r^{iu} = 개인연금 보험료율)</p>

○ 분석결과

- 적정(필요) 노후소득 수준 추정 및 결정

- ※ 적정(필요) 노후소득 수준은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 있음.
- 소득 대비 소비 수준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노인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비를 기준으로 볼 때 58.7%수준으로 추정. 5개 소득분위 기준으로 49.4%(5분위)~72.9%(1분위)
- OECD 등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60% 적용
-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수준은 60% 내외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달성 가능한 노후연금소득 수준 추정(시뮬레이션)

- (연금유형별 비중) 전체 공·사적 연금소득대체율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 퇴직·개인연금은 기여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
- 평균소득자(월 200만원)가 지속적으로 20~40년을 공사적 연금에 가입하면, 이들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2.22~2.32%, 소득대체율은 20%~41.70%로 추정
- 퇴직·개인연금의 수익비는 수지상등 하에, 수익비가 1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절대 비례하는 8.3%~16.6%
- 평균소득자(월 200만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모두에 20년 가입시 전체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3.62%, 퇴직연금 22.25%, 24.13%로 추정
- (국민연금의 높은 소득보장성과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사적연금에 비해 보장성이 높고,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 효과 존재
- 20~40년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시 달성가능 소득대체율은 월 100만원인 가입자는 30.00%~62.55%, 200만원 가입자는 20.00%~41.70%, 300만원 가입자는 16.67%~34.75%로 추정

- (퇴직, 개인연금의 소득절대 비례적 소득보장효과 및 재분배효과 비존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완전적립방식(수익비=1)을 고려하여 산출되었으며,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에 절대 비례하여 연금소득이 보장되며, 재분배효과는 존재하지 않음

-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연금소득 과부족 평가

- 40 년을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수준 달성은 부족하므로 퇴직·개인 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
- 월 100 만원 소득자가 40 년 동안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시 산출되는 합산소득대체율은 97.15%
-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을 40 년을 완전히 채우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므로 현실적 달성 가능성은 희박
- 한편,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을 자영자의 경우, 동 가정 하에서 80.55%의 소득대체율
-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부족 평가)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평균소득가입자(월 200 만원) 기준으로 60% 수준이라고 할 경우 국민, 퇴직, 개인연금 모두 30 년 가입시 합산소득대체율은 56.21%, 모두 35 년 가입시 66.10%
- 따라서, 동 분석가정에 따를 시 공사적 연금을 32~33 년 성실히 가입시 충분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정도의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배려와 개인의 가입의지가 요구됨

○ 민감도 분석

- 임금상승률 변화 : 임금상승률 1%p 증가시 마다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이 누진적으로 증가. 가입기간이 길수록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증가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물가상승률 변화 : 물가상승률 변화에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불변(가입기간에 따라서도 불변)
- 기금운용수익률 변화 : 기금운용수익률 증가에 따라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 달리 나타남. 공적연금 불변(∴DB 형), 사적연금 (∴DC 형으로 산출) 증가
- 할인율 변화 : 할인률 증가 시 소득대체율 감소(1%p 증가시 마다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차적으로 감소)

IV. 결론 및 정책제언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및 설정 규모

-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선정의 현실적 한계 존재
- 정책적 판단 필요
- 다양한 연구결과 및 국제기준을 고려 시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의 60%수준
- 저소득층일 경우 이보다 높고, 고소득층일 경우 이보다 낮음

○ 현실적 도달가능 노후소득보장 수준 및 정책제언

- 가정,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32~33 년 동안 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충실히 가입할 경우 공사적 연금소득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현실적으로 동 기간의 근로기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동 기간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소득원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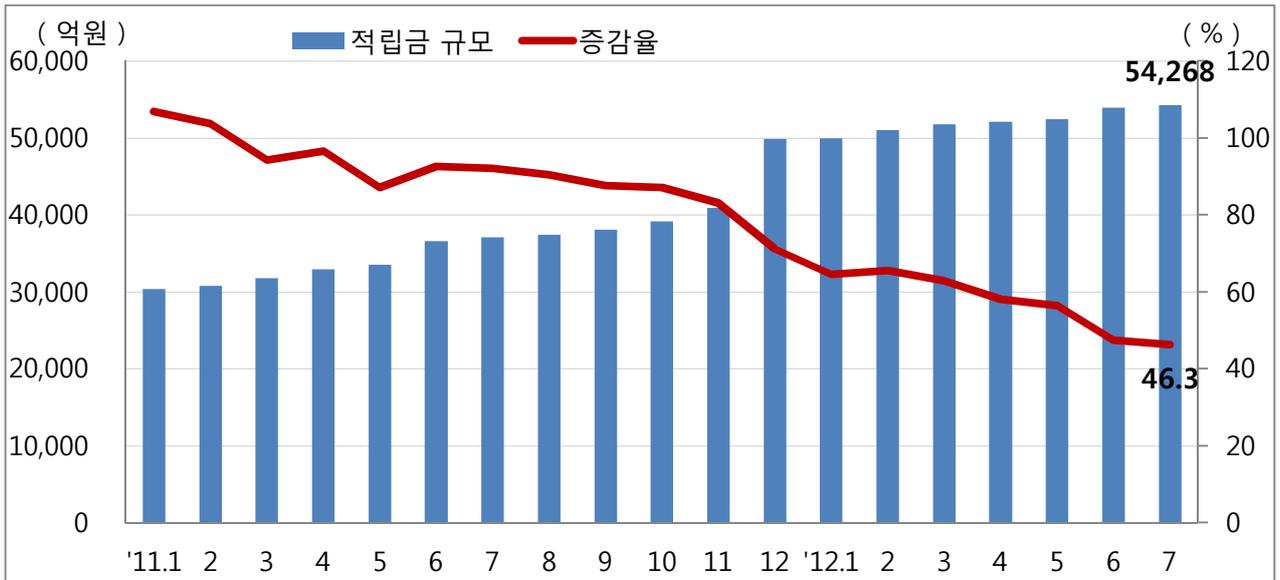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강성호 (02-3218-8624, Ksh0515@nps.or.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7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7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4 조 2,679 억원으로 전년동기 (37 조 1,058 억원) 보다 17 조 1,621 억원 (46.3%)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72,888 개소로 전월(167,460 개소) 대비 5,428 개소 증가
- 총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1.4%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03,022	44,853	18,306	4,894	769	1,044	172,888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1	25.1	33.5	44.6	54.0	80.7	11.4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자기 확신과 경쟁자 무시

다음 두 질문에 답해보자.

- a. 당신은 운전을 잘하는가?
- b. 당신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운전을 잘하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네'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약간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대답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답을 내놓는다. 운전자의 90퍼센트는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다른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실력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곤 한다.

심리학 분야에서 이를 '착각적 우월성'(Illusionary superiority)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자주 거론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인과 비교할 때 자기 능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기업 CEO에게 물어보면 이는 더욱 극명하게 들어난다. '회사의 운명이 당신의 업무에 의해 얼마나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CEO는 80% 이상이라고 응답한다. 성공을 확신하지는 못해하지만, 적어도 회사의 운명은 거의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벤처와 같은 신생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생각은 타당하지 못하다. 신생기업의 운명은 기업 내부의 노력만큼이나 경쟁사와 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경쟁사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경쟁사를 무시하고서 그저 낙관적 미래만을 상상한다면 그저 실패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자신을 볼 뿐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발전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주위 환경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네가 남들에게 불 붙이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 : 로마의 철학자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